

내 삶을 바꾸는 힘, 규제혁신

#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톡톡

::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



행정안전부

#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!



의약품 주입펌프,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애로를  
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.

# 세계 최초로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개발했어요



## 기존

- 2010년 세계 최초로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, 특허를 취득했으나, 품목 미신설과 별도 보험급여 기준 미책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이 곤란했습니다.

**개선** 안양시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으로 식약처 품목 신설과 의료보험 급여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, 13조 규모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, 치명적 의료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\* 식약처,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(2018년 10월)  
복지부, 「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」 개정(2019년 8월)

#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(KS)을 마련했어요



## 기존

- 전북 완주군 소재 P기업은 2015년 지게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 하였으나, 이에 따른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
**개선** 완주군은 2017년부터, 2년여간의 전문가 자문, 대안제시, 부처협의 등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에 관한 인증 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.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상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(1,932억원)와 일자리 창출(429명)이 예상됩니다.

\* 산업부, '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' 국가표준(KSC8569) 개정(2019년 6월)

#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이 빨라졌어요



의료용  
방사선  
발생장치



## 기존

- 방사선 의료기기는 매번 제품별로 허가를 받아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 
(2~6개월 소요)

## 개선

대구광역시는 기업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, 국조실 주관 토론회 등을 통해 시험·검사기관별 허가로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. 이로써 의료기기 출시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관련 제품과 기업들의 신속한 국내외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\* 원자력안전위원회, 원자력안전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2019년 12월)

# 긴급 상황 발생 시, 소방 드론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요



## 기존

-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\*에서 드론 비행이 최소 3일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하여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드론비행이 어려웠습니다.

\* 비행사전승인 대상지역: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, 지표면(건물높이) 150m 이상 등

**개선** 부산광역시는 국조실·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, 화재,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 드론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, 사회 안전망 구축과 드론산업 성장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

\* 국토부, 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정(2018년 11월)

# 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전용공간을 설정했어요



## 기존

- 대전 원자력연구원 반경 약19km (사실상 대전 전역)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연구개발과 시제품 성능 시험을 해야 하는 드론 기업들의 지속적인 애로 해소 요구가 있었습니다.

**개선** 대전광역시는 3년여간 국토부 등 12개 기관과 수십 차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전용공간을 설정했습니다. 지역 드론 경쟁력 확보 및 ICT 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합니다.

\* 국토부, 대전 드론 공원 공역 개시 허가(2019년 9월) 및 항공정보간행물(AIP) 수록(2019년 11월)

#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합니다!



그림자조명, 전통주 관련 규제개선 등 지역발전 기반조성 등을 위해  
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.



# 그림자 조명 광고가 기업 활성화의 빛이 됐어요



## 기존

- 그림자조명\*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가지 불편과 판로 확대에 애로가 있었습니다.

\* (그림자조명) 지주에 있는 전기를 활용, 전자빔을 필름(원고)에 투사하여 바닥 등에 광고 문구(공익적 문구)를 야간에 표출하는 디지털광고

**개선** 대전광역시 동구는 기업입장에서 작지만 절박한 규제해소를 위해 국조실 건의, 부처 협의 등의 노력으로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, 공공목적의 광고물에 대한 그림자 조명이 합법화되어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

\* 행정안전부,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(2019년 7월)

# 막걸리의 총산도 제한 폐지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어요



## 기존

- 맥주, 와인은 산도제한이 없으나, 막걸리는 총산도 제한 규정이 있어 산미를 살린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.

**개선** 울산광역시는 1년여간 지속적 건의 및 노력을 통해 전통주(막걸리)의 총산도 제한이 폐지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\* 식약처, 「식품의기준및규격」 개정(2019년 7월)

# 74개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어요



## 기존

- 산업단지 내 편입토지 소유자와 기반시설 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택지공급 차별, 지원시설 용지 내 공장 입주 불가, 산업시설 내 건축한계선 및 중 대형 필지 구획으로 인한 다양한 기업 유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**개선** 익산시는 토지소유주 보상에 차별을 해소하고, 산단 개발계획 변경, 건축한계선 변경 소필지화 등 기업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, 상시고용 효과 1,500명을 기대합니다.

\* 국토부, 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」 개정(2018년 4월),  
'국가식품클러스터개발계획변경'(2018년 8월)

#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 고충을 해소했어요



## 기존

- 대구혁신도시 의료기업 A업체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 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수년간 적용받아 과다한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.

**개선**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하수도 요금부과 시스템을 정비, 개선해 세금환급을 신속히 조치하고 대구시 소재 209,376개 기업부담을 완화했습니다.

\* 대구광역시 동구, 상·하수도 요금 부과 개선방안 마련(2019년 3월)

# 국민이 체감하는 **규제혁신**을 위해 **행정안전부**와 **지방자치 단체**가 함께합니다!



의료규제 개선,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 
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.

#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심전도 측정, 전송을 할 수 있어요



## 기존

-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,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 법에 저촉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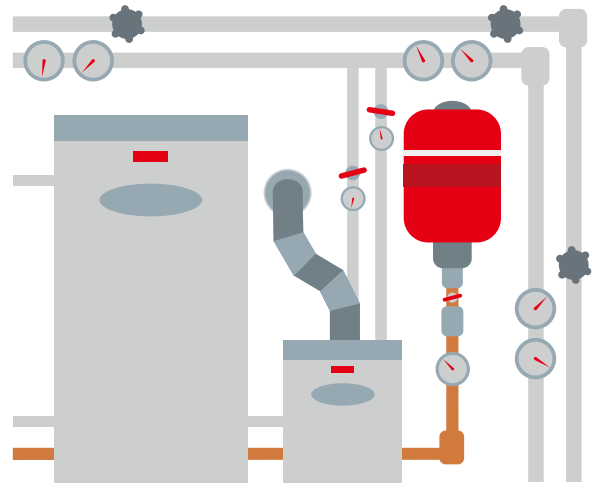
## 개선

부산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, 전송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, 이를 계기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이 발의되었으며, 2019년 소방청 주관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심장병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즉시 시술이 가능해 생존율 향상이 기대됩니다.

\* 소방청,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발의(2019년 5월), 소방청 주관 전국적인 시범사업 실시(2019년 12월)

#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, 투자를 추진해요

도시가스  
소외지역  
보급 확대



## 기존

- 도시가스 「미공급 소외지역」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, 사업자는 경제성 미달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.

**개선** 대전광역시는 2017년 도시가스 사업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자 매칭(+50%)을 제도화 하였으며, 이를 반영, 산업부는 「미공급 소외지역」 의무화 제도(사업자재원 매칭제도)를 신설 하여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에 기여하고, 대전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향상됩니다.

\* 산업부, 「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지침」 개정(2018년 8월)

# 1석 3조로 미집행 공원의 멋진 변신을 기대해요

미집행 공원  
해소



## 기존

-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~20%에 대해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 하나, 대신 국가회계로 귀속되는 '보전부담금'을 주로 납부하여 공원 녹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## 개선

경기도는 개선방안을 마련, 2년간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의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미집행공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재정투입 없이 경기도 내 145개 공원 조성으로 주민휴식 공간 제공 등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.

\* 국토부, 개발제한구역법개정('18.4.17.),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및정비사업업무처리규정개정('18.8.10.)



# 군사보호구역 행정 협약, 군·관·민 협력체계를 구축했어요



## 기존

- 고양시의 약 48%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,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군당국의 일방적 판단으로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습니다.

**개선**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40여회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해제 절차가 복잡한 군사보호구역에 군·관·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(Q-GIS)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협의 절차가 1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되었습니다.

\* 고양시&60사단 행정위탁협약 체결(2018년 12월), 고양시&11항공단행정위탁협약체결(2019년 1월)

#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.

적극행정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합니다.

지역기업과 주민의 아이디어로 상품 개발, 수출 활성화, 세계화로 나아갑니다.

